

2026 교육부장관 면담 결과

- 일시: 2026. 3. 27.(금) 15:00 ~ 16:30
- 장소: 교육부 중회의실
- 참석자: 공무원노동조합연맹, 교육청노동조합연맹,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,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대표 각 2명
- 주요내용

1. 교육부 지방공무원 상설 교섭 창구 마련

구분	내용
노동조합 요구	- 교육부 내에 지방공무원 전담 상설 교섭 창구(조직) 설치 - 장관·국장급이 참여하는 정례 노사협의 구조 제도화
교육부 답변 요지	- 현재는 교육자치협력과(자치협력·협력자치과 등)를 통해 시·도교육청·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 - 이 부서를 중심으로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함 - 교육감과 장관 사이 모호한 권한 관계는 시·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하는 상시 협의 구조(교육자치 정책 협의회 등)를 만들어 그 안에 노사·노조 의제도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방향 제시
결론	- 별도 독립 상설 교섭기구 신설은 즉답·확정 아님 - 기존 교육자치협력과 기능 강화 + 교육감협의회와의 상시 협의체에서 노사 의제 포함·논의하는 방향으로 검토 단계

2.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정원 자율성 확대

구분	내용
노동조합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청 조직·정원 운용 자율성을 가로막는 총액인건비제 폐지 또는 대폭 개선 - 인구·학생 수·현장 수요에 맞게 교육감 재량으로 정원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
교육부 답변 요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입장 표명 - 다만 총액인건비제는 교육부 단독 권한이 아니라 행안부·기재부 등 타 부처와 연동된 제도임을 설명 - 단기간에 폐지는 어렵지만, 교육 분야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·검토하겠다는 방향 제시
결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즉각 폐지 수용은 아님 - 관계부처와의 협의·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약속한 수준(검토·협의 단계)

3. 학생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일률 지정 개선

구분	내용
노동조합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일률 지정하는 현재 구조를 개선 - 실제 안전·시설 관리 책임이 있는 인력에게 적정 권한·책임을 분산할 수 있도록 지정 방식의 유연화(“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” 등) - 2020년 정부교섭 당시 교육분과 교섭 시 소방청의 개정안 의견수렴이 있을 때 교육부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니 약속을 이행해 주길 바램. 4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.
교육부 답변 요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한다는 장관 말씀이 있었고 - 관련 규정은 소방 관계 법령·타 부처(소방·행안부 등)와 연결되어 있어, 관계부처와 함께 법령·지침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방향 제시
결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선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, 그러나 구체안·일정은 미정 - 관계부처와 법령·지침 수준에서 개선을 검토하는 단계로 정리 가능

4. 학교회계 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 반영

구분	내용
노동조합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 행정·회계·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식적인 경비 항목(업무수행경비, 특정업무경비 등)으로 학교회계에 명시 반영 - 개인 부담·비공식 처리 관행 해소, 행정실·학교의 실질 업무비 보장
교육부 답변 요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장의 업무 부담·비용 부담 실태를 파악할 필요에 공감 - 예산편성 기준과 맞물린 사안이라, 학교회계 지침과 예산 기준을 점검해 - 업무수행경비·특정업무경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, - 시·도교육청 재량과 중앙 지침의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정리 가능
결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체적인 신규 항목 신설·금액 수준 제시는 없음 - 실태 파악 및 지침·기준 개선 검토를 약속

5. 학교 근무자 운영수당 인상 및 기술정보수당 병급

구분	내용
노동조합 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운영수당 인상 - ‘기술정보수당’ 등과 병급(동시 지급)이 가능하도록 수당체계 개선
교육부 답변 요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 현장의 업무 강도·복합성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기조로 설명한 것으로 요약됨 - 다만 수당·보수 체계는 인사혁신처·기재부 등 중앙 인사·재정 부처와 연계된 영역임을 언급하며, - 관련 실태·요구를 정리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, 향후 보수·수당 제도 논의 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향 제시
결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즉시 인상·병급 허용을 약속한 것은 아님 - 근거자료 정리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중장기 보수체계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검토 단계

6. 각급 학교 행정실 법제화

구분	내용
노동조합 요구	- 각급 학교 ‘행정실’을 법령에 명시된 공식 조직으로 규정(법제화) - 행정실의 법적 지위·기능·정원을 명확히 해 인력·업무·책임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
교육부 답변 요지	- 행정실의 역할·중요성, 법적 지위의 모호함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취지 - 과거부터 관련 법안이 반복 발의됐으나, 교원단체·공무원단체·교육당국 간 이해 차이로 진통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 - 교육부 주관으로 공청회·협의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, 교육감협의회·노조·교원단체와 함께 합의 가능한 법·제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향 제시
결론	- “행정실 법제화 즉시 추진·시한 제시” 수준까지 나가지는 못하고, - 공론화·협의 구조를 만들고,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중장기 검토 단계

7. 법 범위를 넘는 교원노조 단협으로 인한 현장 갈등 및 교육부 역할

구분	내용
노동조합 요구	- 일부 교원노조 단체협약이 법령 범위를 넘어 타 직종·학교 운영에 영향을 미치면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지적 - 교육부가 중앙차원에서 법 위반·권한 침해 소지가 있는 단협 조항을 점검·시정하고, 현장 갈등을 조정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
교육부 답변 요지	- 단체협약은 노조 자율성과 교육청 자치가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, - 법령을 명확히 벗어난 내용이나 타 직종 권한 침해, 학교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주는 조항에 대해서는 - 법령 해석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, 시·도교육청과 협력해 점검·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향 제시 - 필요시 노조·교육청·교육부가 함께하는 중앙 협의 구조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요약됨
결론	- 개별 단협 조항을 즉시 무효화한다는 식의 강한 조치는 아니고, - 법령 준수 기준·가이드라인 마련, 교육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갈등을 완화·조정하겠다는 방향 설정 단계